

# 금융소득 과세때 투자손실은 감액… 비트코인도 과세

## 정부, 내년 세법개정안

특금법 통과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가능토록 제도화 검토  
조세공평주의 실현의지 반영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론  
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에 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투자  
소득 손익통산 과세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  
안을 담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  
부가 세법을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



정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론  
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  
소에 화폐별 시세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  
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  
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  
을 논의해 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  
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내고,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거래 내역은 확  
보가 가능하겠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마다 시세가 달라 기준시가 산정이 쉽  
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  
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  
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  
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의 이익  
과 손해를 통틀어 이익이 났을 때만 과  
세하는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조세공  
평주의 일환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  
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금융투자소득 손  
익통산 과세 등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  
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  
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  
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  
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칸막이식 열거주의  
과세도 조세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는 지적이다. 예컨대 같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직접투자인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인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  
장이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자본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궁극  
적으로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  
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 원칙,  
비슷한 소득이라면 비슷한 세금을 낸다  
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제 정비  
를 긴 시각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  
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업무흐름 한 번에 파악… 카톡과 달리 일·삶 분리"

### 도전! 스타트UP 플로우

게시판·전송·채팅·회의 등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 한 눈에  
익숙한 UI/UX로 사용자 편의 ↑  
인수인계 용이하고 연속성 강점  
실리콘밸리 중심 美 진출 준비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카카오톡  
으로 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편리하  
긴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업무 지시가  
내려와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카  
카오톡 등으로 오고 간 업무 내용 보안  
도 문제다.

'플로우'는 카카오톡과 네이트온 등  
을 대체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협력툴이다. 플로우로 파일과 일정을  
따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업무 타임라인  
을 정리할 수 있으며 메신저 기능도 이  
용할 수 있다.

"사람들의 니즈는 변하지 않는데 도  
구가 변합니다. 예전에는 걸어다니다가  
열차 타고, KTX 타고.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커  
뮤니케이션 방식을 갖고 싶다는 기업의  
니즈는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바뀌는 거죠. 오프라인 서류에서 이메  
일, 메신저, 지금은 소셜 방식의 협업툴  
을 이용합니다."

#### ◆업무 타임라인 한눈에 정리

이학준 대표는 '플로우'란 이름처럼  
업무 흐름을 파악하면서 일을 할 수 있  
게 도와줄 수 있는 협업툴을 만들었다.  
플로우는 게시판·파일 전송·채팅·회의·  
공지 등 기능으로 협업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언제든  
쉽게 볼 수 있게 보관해 자산화한다. 네  
이버 밴드처럼 한국인이 익숙한 UI/U



이학준 플로우 대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안기능까지 갖춘 덕에 현대기아차  
나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과 계열사부터  
시작해 보맵·나노브릭 같은 스타트업,  
중앙미디어그룹·전자신문 등 언론사까  
지 플로우를 이용한다. 현재 플로우의  
누적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다.

"대부분 게스트계정으로 들어와서  
플로우를 알게 돼 자기 회사에서도 사  
용하고 싶다면 고객이 됩니다. 지인 추  
천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  
다. 유료계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기  
업 수가 올해 초에 비해 현재 3~4배 정  
도 증가했습니다."

#### ◆글로벌 고객 갖는 SW 회사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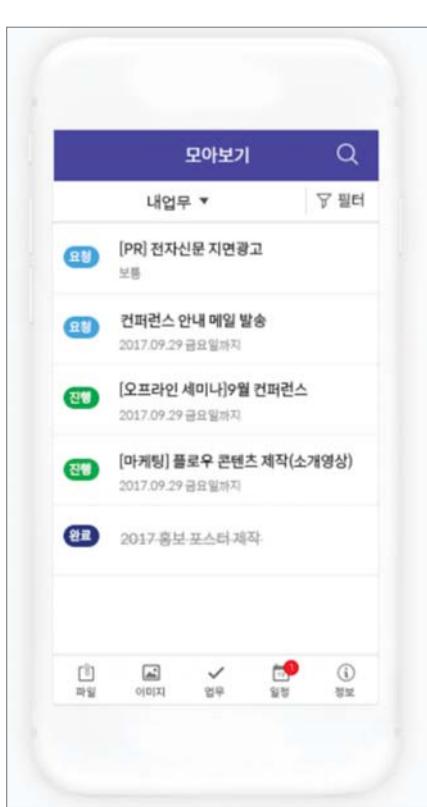
플로우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학준 대  
표는 빨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중  
으로는 플로우의 해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타깃은 해외에  
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다. 국내 기  
업이 해외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하면서  
플로우를 접할 수 있게 해 고객층을 늘  
릴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한다는 것 자  
체가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 IT의 중  
심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서비스라는 믿  
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학준 대표의 목표는 플로우를 해외  
고객을 모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곳은  
SAP라는 기업용 ERP 회사입니다. 미  
국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곳은 아마  
존·구글 등 B2B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  
는 곳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소프  
트웨어 모델로 글로벌 고객을 갖는 좋은  
회사, 그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해보다 훨씬 좋은 회사를 내년에 만들

것입니다." /배현님 기자 ericabae1683@  
/김희주 기자



업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플로우 모바일 화면

## "경제 성장에 기여 예상" 中 인프라투자 회복세

###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지난해 부진했던 중국의 인프라투자  
가 올해 들어 다소 회복세를 보이며 중  
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간한 해외경제포  
커스 '중국 인프라투자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프라투자의 전  
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7.4%에  
서 2017년 19%, 2018년 3.8%, 올해 10  
월까지 4.2%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중국 인프라투자 증가율  
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부진  
이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투자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하위 산업별로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 둔화세가 지속된 반면 교통 인프  
라는 증가율이 소폭 회복됐다. 또 통신·  
방송 관련 인프라는 크게 증가했다. 인  
프라투자는 ▲교통·운송(38%) ▲환경·  
공공시설(59%) ▲통신·방송(2%) 등으  
로 구성됐다.

인프라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높은 증  
가율을 보인 것은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 도시인프라 및 차세대 통신망 구  
축 노력에 주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투자 등 중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용 채권  
을 지난해 1조3500억원에서 올해 2조  
1500억원으로 발행한도를 크게 확대했  
다. 또 일반적으로 매년 3월의 전인대에  
서 최종한도가 결정돼 5월경 발행되기  
시작하는데 올해에는 이례적으로 지난  
해 12월 조기 발행을 결정하고 1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 인프라투자는 도  
시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안  
정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등에 따라 안  
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견조한 인  
프라투자 수요가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하방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